



## I 그 간의 추진경과

-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

\* 예) 실물증권의 위·변조 사고 발생, 실물증권 발행·유통·보관비용 발생, 조세회피·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차단의 어려움 등

- '08.8월 금융위·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기로 합의

※ 상법에는 주권·사채 전자화 근거만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특별법에서 정함

- '09.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

※ '11.6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13.1월 시행

- '16.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제정

- '19.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 제도 시행일을 '19.9.16.로 정함

- '19.8월 전자증권법 관련 18개의 하위규정\* 일괄 정비

\* 제정규정 3건(고시 2건, 예탁원 규정 1건), 개정규정 15건

- '19.9.16. 전자증권제도 시행

## II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 9.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기업·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국 법무부 장관,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

### ※ 전자증권제도 기념식 개요

• 일시/장소 : 9.16.(월), 10:30~11:30 /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

• 주요 참석자 : (정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이종걸 의원, 김정훈 의원,  
유의동 의원, 유동수 의원

(유관기관)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

## [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해 왔음을 언급하고,

\* 1일 거래규모('19.9.5 기준): 상장주식 11조원(14억주), 상장채권 8조원

- 그간 예탁제도(1974년), 집중예탁제도(1994년)를 도입하였으나,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

-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

- ①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증권의 디지털화(digitization)”** 라고 언급하면서,
  - 증권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될 것이라 강조

\* 예탁원 오픈API를 통해 증권발행·유통 빅데이터 제공 → 혁신 핀테크 서비스 가능

- ② 또한,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증권의 실명제(實名制)”** 라고 하면서,
  - 증권발행·소유·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발행·위조·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

-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함을 강조

-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 영국의 종이증권 위기(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

-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 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프론트 오피스**의 혁신은 이루어졌으나, **백 오피스**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
-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가폭락으로 매도주문이 폭증하여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 청산·결제 지연

- 아울러,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

- 특히,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뀔 때 따라 투자자·발행기업이 해킹·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히 챙겨줄 것을 당부

## [법무부 장관 축사 주요내용]

- 조국 법무부장관은 '16년 3월 「전자증권법」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 과정을 언급하며,
  -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19. 6월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음을 소개하고,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
- 조국 법무부장관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이라 평가하고,
  -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 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 하며,
  - “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추 수 있게 할 것”이라 설명
-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
  -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 공정경제를 위한 「상법」 개정,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 “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고 의지를 표명

### III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

①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발행·유통·권리행사**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

- 동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므로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이 개선

②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

-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

\* ① 설권(設權)증권인 기업어음증권(CP), ②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

#### < 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 >

자본시장법상 증권						기타 증권
채무증권 CP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 증권	증권예탁 증권	투자계약 증권	CD

③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함

- 상장주식·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발행인의 신청 不要), **실물발행이 금지됨**(실물발행시 효력 무효)
-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 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Q&A 4, 5번)

\*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 제한

④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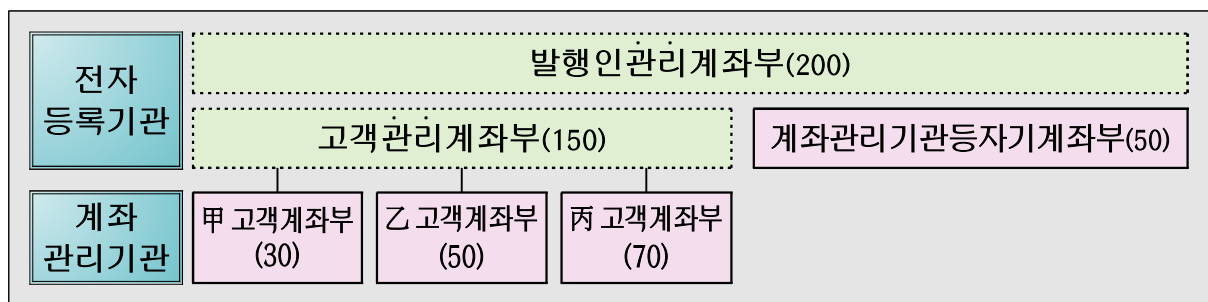
- 발행인은 '정관변경 → 전자등록 신청 →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가 필요(☞Q&A 8번)

## 5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 발생

- \* ❶ (권리추정)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  
 ❷ (권리이전·질권설정 등)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  
 ❸ (제3자 대항)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 대항 가능 등

## 6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를 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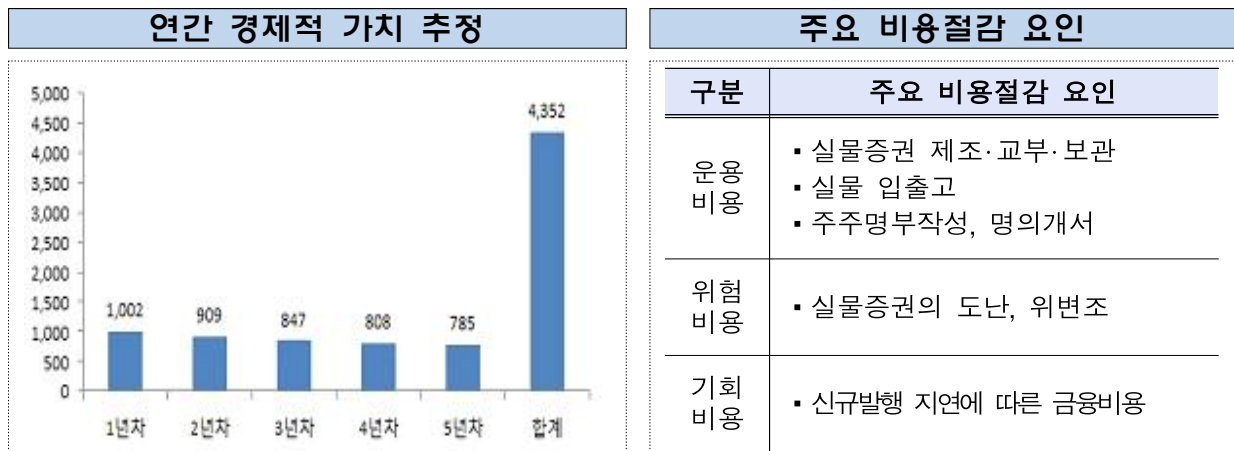
- \* (전자등록기관)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거래내역을 관리(예탁원이 수행)  
 (계좌관리기관)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매매를 관리(증권사·은행 등 수행)



## IV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

-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이 실물로 발행·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
-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352억원(자본시장연구원, '14.12월) 내지 9,045억원(삼일PWC, '17.11월)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됨

< 경제적 가치창출 추정(자본연, '14.12월) >



## (1) 주주 · 투자자 입장

### ① 증권 위·변조 등 사고로부터 피해위험 제거

- 실물 발행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증권의 위·변조, 도난, 분실, 멸실 등의 위험\*이 제거

※ 지난 5년간('13~'18년) 총 11회, 156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음

◎ 사례 1 : '13년, 외환은행기금채권 총 65.9조원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국내에 유통하려던 8명을 경찰이 발각, 구속

◎ 사례 2 : '14년, ○○전자의 총 56만주, 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정교하게 위조해 명의개서를 시도한 자를 예탁원이 발견해 경찰에 인도

### ② 주주 권리(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 등) 미수령 가능성 제거

- 무상증자·주식배당·현금배당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내용이 자동등록되므로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 차단\*

※ 실물주권 소지자의 권리미수령분의 가치는 약 880억원 이상

◎ 사례 1 :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하여 주식·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 사례 2 :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식·배당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실기주)

< 미수령 주식·현금 및 실기주의 규모('19.6월) >

사례 1(미수령 주식 등)	사례 2(실기주)
(주식) 601만주, (평가가치) 504억원	(주식) 178만주, (실기주과실) 375억원

### ③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 증대

- 예탁제도에서는 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7일~90일)할 경우 동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명의개서, 질권등록, 신탁 등) 제한

\* 예탁주식은 예탁원이 명부상 주주 → 주총개최, 배당 등을 위해 실질주주 파악·확정 필요(시간소요) → 해당기간동안 권리변동 방지를 위해 주주명부폐쇄

⇒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음



## (2) 기업(발행회사) 입장

### ① 증권 발행·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

- 증권실물이 존재할 경우 필요한 다양한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조달(상장 등) 및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 증대

\* 예) 신규상장 5영업일, 무상증자 8영업일,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

#### ◎ 가상 사례 (00사가 주식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

주요 일정	As-Is 시나리오	To-Be 시나리오
주주총회 개최	'18.03.23	'18.03.23
구주권제 출기간	'18.03.26~04.26	'18.03.26~04.09 (병합 공고·통지)
매매거래정지기간	'18.04.25~05.15	'18.04.06~04.18
기준일	'18.04.26	'18.04.09(기준일 = 효력발생일)
신주 효력발생일	'18.04.27	'18.04.10(전자등록일, 유통제한)
교부일	'18.05.15	폐지
상장일	'18.05.16	'18.04.19(전자등록일, 일반등록)

### ②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

- 기존에는 주주현황을 통상 연 1회 파악하였으나,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
-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

현 행	개 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①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을 정한 경우, ②기타 필요시 (상장심사, 채무자회생, 공개매수 대응)</li> <li>• (작성빈도) 통상 연 1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유) ①법령상 필요시, ②일정주기(분기)별, ③발행사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경우, ④기타 계약·약관 등 준수를 위한 경우</li> <li>• (작성빈도) 특별한 사정없이도 분기별 작성이 가능</li> </ul>

#### ◎ 가상 사례 (경영권 위협 등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

- A사는 과도한 배당요구, 경영간섭 등으로 유명한 헤지펀드의 주식매입 정보를 입수하고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여 주주내역을 파악, A사에 우호적인 주요 주주들을 조기에 포섭하여 헤지펀드의 무리한 요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절



### (3) 금융기관 입장

#### ① 다양한 증권사무(증명서 발급, 신고 등)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

- 각종 증명서 발급시 위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

\* 예) (현행) 투자자의 소유증권증명서 발급요청시 증권사는 위탁원을 방문하여 신청·수령 필요 → (개선)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

- 실물을 전제로 하는 보호예수 등 각종 절차도 폐지

#### ② 실물증권 입출고(증권사), 증권담보 보관(은행) 등 관리부담 경감

- 증권사는 잦은 실물증권 입·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 비용 부담이 사라짐

\* 예) '18년 실물증권 입출고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평균 20여개 증권사가 위탁원 창구를 방문하였으며, 연간 약 9,600건의 실물입출고 업무 처리

- 은행은 담보대출시 더 이상 담보증권 등을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 전자적 방식으로 질권 설정 가능

\* 예) ○○은행은 4,200여건, 3조 7,000억원의 증권담보대출을 취급 → 이중 2,700여건, 2조 9,000억원 대출에 대한 증권담보를 실물로 보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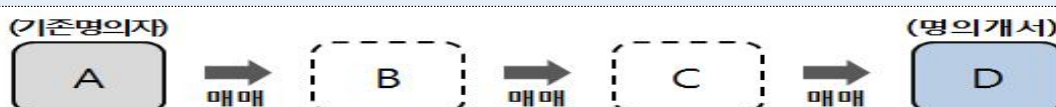
### (4) 정부 · 감독기관 입장

#### ① 과세당국의 과세기준 명확화

-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 차단 가능

##### ◎ 사 례 (양도소득세 탈세)

- (현행) B와 C가 명의개서 없이 실물을 양도 후 D가 명의개서를 한 경우, 주주 명부상 A→D로 양도된 것으로 기재 : B, C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
- (개선) 모든단계의 양도행위가 전자적 계좌부에 기재되므로 B, C도 양도소득세 납부



## ②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

- 현재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의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해 있고 정확성·시의성도 부족

\* (예시) 거래소(상장정보), 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산재

⇒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상환, 소유상황,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즉시 수집·분석 가능

### ◎ 활용 예시

- 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룰) 준수여부 검증
- ② 기업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여부 검증
- ③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의무 준수여부 검증

## V 제도시행 관련 유의 사항

①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이 필요함**

-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

\* 특별계좌에 등록된 권리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식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이전을 제한

-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로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

②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증여·상속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함

※ 증권의 취득사유별로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 출고확인서, 법원 판결문 등 (상세 문의 : 명의개서대행회사(예탁원, 국민은행, 하나은행 / 연락처 불임2))

### ③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

- 따라서 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할 필요

\* 전자등록 대상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http://www.ksd.or.kr))에서 확인가능

### ④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위해 소정의 절차가 필요

- **(상장회사)** 회사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상장회사가 제도시행 후 새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예탁원에 제출 필요
  - 다만,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탁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신청 가능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가 전자증권 전환을 위해서는 절차 필요

#### ◎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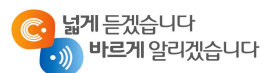
- ①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 및 정관 개정
- ② 예탁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제출
- ③ 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 신청, 전자등록일 지정(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
- ④ 관련 사항\*을 주주에게 공고(1개월 이상) 및 통지(서면)

\* 주권효력상실,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korea.kr](mailto: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1 투자자, 주주 Q&A

1.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 ☐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http://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대상 종목
-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

2.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이라던데 상장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 유가증권(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 기타 K-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닙니다.

3.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물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 실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권리인정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요?

- ☐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므로, 이 경우 투자자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전자적)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

4.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주권의 효력이 실효된다는데,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

☐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전지점, 국민은행 전지점, 하나은행 전지점(상세 참고)

○ 또한,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하며,

\* 예) 주주명부상 ‘홍길동’의 이름으로 명의를 되어있는 경우 ‘홍길동’의 이름으로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함

-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로의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하여 줍니다.

5. 지인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주식을 제 이름으로 전자등록 할 수 있는지요?

☐ 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주권의 취득사실,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한국예탁결제원 전지점, 국민은행 전지점, 하나은행 전지점(상세 참고)

6. 실물주식의 양수도 등 매매거래는 무효인가요?

☐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거래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자등록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http://www.ksd.or.kr))에서 확인가능

7.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되면,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예) 소수주주권 행사(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열람권, 주주제안권 등) 등

- ☐ ① 소유자증명서\* 또는 ② 소유 내용의 통지\*\*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

\*\* 전자등록기관이 전자증권 소유 내용을 발행회사 등에게 통지

- ☐ 소유자는 증권사 등(계좌관리기관)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발행회사 Q&A

8. 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회사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없는지요? 언제까지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요?

- ☐ 상장회사라 하더라도, 제도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그러나,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정관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 비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입니다. 저희 회사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 등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① 발행회사는 전자등록 신청 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 국민은행, 하나은행)를 선임하고 **정관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② 한국예탁결제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다운로드) <http://www.ksd.or.kr> > 고객정보센터 > 양식/서식 > 자주쓰는 양식/서식

※ 접수처 :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5층 예탁총괄팀(☎3774-3000)

③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전자등록일**을 지정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을 신청해야 합니다.

④ **주주명부상 권리자**(등록질권자 포함) 대상 서면으로 **1회 이상 전자증권 전환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전자등록기관 홈페이지에 **1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주권효력상실,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

**3 금융기관 Q&A**

**10. 전자증권 전환 대상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후 실물주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담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

☐ 담보권자인 질권자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실물주권을 단순히 보유(점유)만 하고 있을 경우, 해당 주권은 실효되므로 사실상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 따라서,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협의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에 관한 권리를 질권설정자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한 후에 해당 증권회사에서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

<b>11.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예탁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b>
---

- ☐ 전자증권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되므로,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증권에 대해 더 이상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 다만, 전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증권(기업어음, 창고증권 등) 및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등의 발행 회사를 위해 예탁제도는 당분간 계속 운용할 예정입니다.

## ① 전자증권 전환 주식종목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

-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www.ksd.or.kr](http://www.ksd.or.kr)) → 전자증권제도 → 제도 시행일의 전환 → “전환 대상 종목”

- 전자증권 주식 종목별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 가능(그림 참조)

< 명의개서 대행기관 조회 그림 >

전자증권제도	전환 대상 종목														
<p><b>전자증권제도 소개</b></p> <p>개요 운영기관 및 계좌구조 제도 변화 개요</p> <p><b>제도 시행일의 전환</b></p> <p>개관 절차 조치사항 전자등록 신청</p> <p><b>전환 대상 종목</b></p>	<p><b>■ 전환 대상 종목</b></p> <p>본 화면에서 제공하는 전환 대상 종목 내역은 법률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예탁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주식의 명단입니다. (= 제도 시행일의 전환 관련 상세 안내)</p> <p>전자증권 전환 이후에는 전환 대상 종목의 미래락 실물주권(증권회사에 예탁되지 않은 주권)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 전환 대상 주식의 권리자(주주 및 질권자)는 소유 중인 주식의 전환 대상여부를 꼭 확인 하시기, 제도 시행일 이후의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 <p><b>■ 전환 대상 종목 조회</b></p> <p>①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식의 공고문은 해당 종목 조회 후 “공고문” 글자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p> <p>② 2019년 8월 21일 이후에도 전자증권 전환 대상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주주는 향후 보유 주식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해당 종목의 “<b>대행회사(주권 제출처)</b>”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p> <p> <input type="radio"/> 전체 조회    <input checked="" type="radio"/> 개별종목 조회    <input type="radio"/> 발행회사별 조회         </p> <p>             - 전자등록일: 2019-09-16              - 종목: 중소기업은행    KR7024110009    <input type="button" value="Q"/> </p> <p><input type="button" value="조회"/></p> <table border="1"> <thead> <tr> <th>주식종류</th> <th>종목코드</th> <th>종목명</th> <th>발행회사명</th> <th>대행회사 (주권 제출처)</th> <th>상장구분</th> <th>공고문</th> </tr> </thead> <tbody> <tr> <td>보통주</td> <td>KR7024110009</td> <td>중소기업은행</td> <td>중소기업은행</td> <td>한국예탁결제원</td> <td>유가증권</td> <td>공고문</td> </tr> </tbody> </table> <p style="text-align: right;">1    <input type="button" value="Download"/></p>	주식종류	종목코드	종목명	발행회사명	대행회사 (주권 제출처)	상장구분	공고문	보통주	KR7024110009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	공고문
주식종류	종목코드	종목명	발행회사명	대행회사 (주권 제출처)	상장구분	공고문									
보통주	KR7024110009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유가증권	공고문									

## ②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및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부산 본사, 서울사무소, 광주·대전·대구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

- (문의)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 1577-6600

- (국민은행)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 또는 전국 모든 지점

- (문의)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 02)2073-8114

- (하나은행)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 또는 전국 모든 지점

- (문의)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 02)368-5800

-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및 교부가 불필요해지고, 전자등록기관으로 주주확정 등의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
- 발행회사는 보다 빨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투자자는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매매)할 수 있음

[참고] 주식권리 사유별 단축 일정

권리사유	상장	비상장
유상증자	5영업일 단축	7영업일 단축
무상증자	8영업일 단축	9영업일 단축
주식배당	5영업일 단축	7영업일 단축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	약 21영업일 단축
회사분할	25영업일 단축	26영업일 단축
자본감소	9영업일 단축	11영업일 단축
합병(분할합병)	9영업일 단축	11영업일 단축
주식교환/이전	9영업일 단축	11영업일 단축
종류주식 일괄전환	19영업일 단축	20영업일 단축
CB/BW청구, 종류주식 전환청구	2영업일 단축	34~42영업일 단축